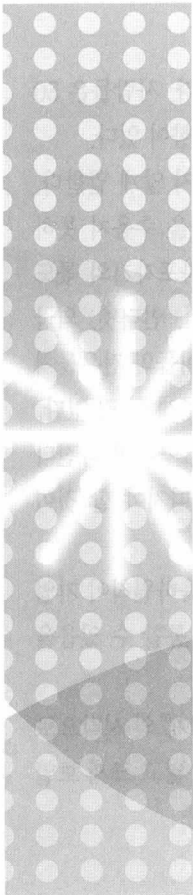


심야전기제도 시민배심원단 존폐논의 제조업체와 정부간 치열한 설전벌여



'심야전기제도' 존폐와 관련해 2차 시민배심원단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2일 서울시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시민배심원단 회의'는 현행유지측 증인인 광일 시스템 김상수 대표와 대성에너텍 안지호 이사,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현관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전기제도 존폐여부와 관련한 증인간 상호질의 및 배심원과 증인간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1차 회의때 심야전기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현행유지측 증인이 모두 빠진 가운데 개최돼 배심원단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2차회의에는 농민대표 대신 제조업체 대표가 증언자로 참여해 현행유지측 입장 전달이 원활하게 전해졌다는 평가다.

회의에서 현행유지측 증언자인 광일 시스템 김상수 대표는 "연도별 심야시간대 전력부하 현황을 볼때 심야전기는 심야시간대 피크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실제로도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야전기가 폐지, 축소되고 있어 심야전력의 누진계약전력의 숫자만 가지고 탁상공론식의 논의는 큰 오판"이라며 "수도권 개발로 인한 일반전기의 급증으로 인해 LNG 발전이 필요한 것이지만 심야전기 때문에 부득불 LNG 발전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기저발전설비 증가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상수 대표는 "심야전기제도는 단순한 요금인상과 제한정책이 아닌 외국사례처럼 꾸준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제품개발(5시간용, 8시간용, 10시간용)및 제조업체의 품질개선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체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이미 4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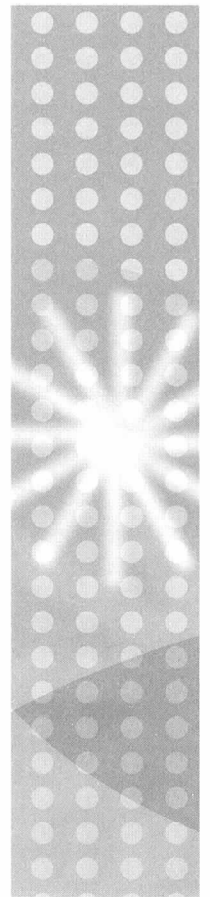
년 전부터 심야제도를 활용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심야축열기기만 대상이 아닌 일반용전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고갈을 대비한 대체에너지 연구비용으로 우리나라보다 무려 100배가 넘는 자금을 투자할 만큼 국가 최대의 중대사로 에너지에 관한 문제 발생시 해결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심도있게 다뤄야할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놓고 아직 후진국형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로 인류 역사상 중요한 전기에너지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야간의 전력 피크치를 심야축열기기만을 놓고 문제 삼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론했다.

이외함께 대성에너지 안지호 이사는 폐지찬성측 증언자인 녹색연합이 주장한 심야기기 부하로 인한 손실이 유지보수율을 포함해 연간 7000억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국고에 손실을 주고 있다면 마땅히 전면 폐지하는것이 옳은일이지만 제한조치나 쿼터제 도입은 소비자나 제조업체들 및 대리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현관 부장도 “결과론적으로 산자부는 심야전기제도에 있어 과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의 손실을 모조리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며 “산자부는 심야전력 제한공급에 있어 심도 있게 제 검토를 요구하며 실패의 정책제도에 따른 소비자의 불이익과 업체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관련해 산업자원부 박정욱 전기보 호팀장은 “심야전력은 2002년 이후 심야 시간대 전력수요가 기저 및 필수가동설 비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해 당 초 도입취지 달성이 어렵게 됐다”라며 “2006년 겨울철 심야시간대 평균부하는 4494만 kW로 적정부하수준인 4070만 kW를 424만 kW 정도 초과해 발전단가가 고액인 LNG 발전기가 가동돼 겨울철 LNG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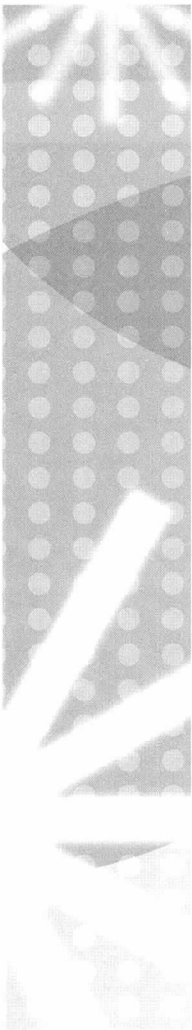
특히 LNG 발전으로 인해 높아진 공급원가에 비해 요금 현실화가 지연돼 원가이하의 낮은 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간 교차보조가 발생했는데 2006년 심야전력 판매단가는 34.60원/kWh로 적정요금 60.11원의 57.6%에 불과했으며 올해 1월에는 9.7%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37.96원이라는 수치를 보더라도 겨우 63.2%에 그친다고 전했다.

이로인해 2006년 4778억원을 주택용·일반용 등 타 소비자가 추가부담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난방비용면에서도 2차 고급에너지인 심야전력은 경쟁연료인 등유에 비해 저렴해 등유난방을 대체하고 있어 국가적 에너지소비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차에너지(LNG)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손실을 감안할 경우 심야전력 난방의 열효율은 44.0%에 그쳐 등유난방의 80%에 크게 미달된다고 밝혔다.

박정욱 팀장은 결과적으로 이해 관계자의 입장과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할 때 심야전력제도의 폐지나 급격한 요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농어촌 등 에너지네트워크 소외지역에 한해 신규신청을 허용하는 등 신규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초과부하 해소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 적정 요금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심야전기의 수요관리 방향에 대해 첫째 심야 전력 수요관리 목표를 수립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연도별 기저발전증가량중 일부만 신규수요에 대응토록하고 나머지는 초과부하 해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초과부하 해소 및 신규수요 억제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심야전력 쿼타제를 도입해 강력한 수요관리를 위해 매년 심야전력 신규공급 쿼타를 설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할당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에너지 구입여건이 열악한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을 위주로 쿼타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신규수요를 연 100만KW이하로 억제시킬 경우 2014년까지 초과부하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신규공급 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용에 한해 호당 50kW까지만 신규공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30kW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용량을 제한했을 경우 약 50%의 신규수요 억제가 가능하며 2006년의 신규신청이 212만kW인점을 감안할 때 100만kW 이내로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넷째로 심야전력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제시했다.

심야전력의 적정 요금수준을 재검토해 연도별 인상율을 제시해 초기단계에는 상대비용을 고려해 등유난방으로 대체될수 있는 수준까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수요절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심야전력 도입취지 및 향후 요금인상 가능성등을 집중 홍보해 신규가입 유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심야전력 신규접수시 개별안내, 전기요금 청구서 안내문구 삽입등 홍보노력을 강화하고 등유등 대체난방수단과의 연료비 및 난방효과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난방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전했다.

여섯째로 심야전기보일러 판매업체 불법 판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심야보일러 업계의 광고실태를 조사해 허위·과장광고 업체를 고발하고 단속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보일러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배심원단과 증언자간의 질의및 답변이 끝나고 시민배심원간 존폐유지를 위한 의견이 교환됐으나 비공개로 논의됐으며 결과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단 이날의 결과는 이달 말경 개최되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에서 배심원단의 결과를 가지고 재 논의할 방침이며 이후 갈등특위는 시민배심원단의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